

북한의 경제학과 경제현실
:북한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이론, 정책, 성과를
중심으로*

朴 淳 成

- I. 머리말
- II. 북한의 사회주의경제발전이론
- III. 북한 경제성장정책의 변천 과정
- IV.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성공과 실패
- V. 이론과 현실의 괴리, 동요하는 경제정책

I. 머리말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경제정책의 최고 목표로 설정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심각한 경제위기를 표출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위기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특수한 현상은 아니며 198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국가들에서 광범위하게 나타

* 이 논문은 1997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인문사회과학 중점연구)의 지원에 의해 연구, 완성되었음.

나기 시작한 일반적 현상의 한 유형이라고 판단된다. 경제위기라는 현상이 사회주의국가들 전반에서 나타나게 된 근본원인으로는 명령형 계획경제체제가 지닌 본질적 한계를 우선적으로 지적하여야 하겠지만, 이와 함께 사회주의경제권이 경제발전과정에서 자신의 경쟁체제로서 그리고 외부조건으로 부딪쳐야 했던 자본주의세계경제체제의 역동성을 들어야 한다.¹⁾

그런데 자본주의세계경제체제와 관련하여 사회주의국가들이 안고 있던 문제는 북한의 경우에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세계적 냉전체제가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의 분단이라는 형태로 한반도에 고착된 상황에서,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추구하던 북한은 남한과 정치적·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체제경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더욱이 한국전쟁 이후 지속된 북한의 공세적인 대남정책과 미국에 대한 투쟁적 방어전략(반미투쟁)은 북한의 경제를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경제권과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았다.²⁾ 그 결과 북한의 경제는 다른 어떤 사회주의국가들보다 엄격한 폐쇄경제체제를 유지하였으며 심지어 일종의 경제붕쇄상태 내지는 농성상태에 있었다.³⁾ 사실 북한의 자력갱생노선은 역설적으로 북한 경제가 선진자본주의경제권으로부터 붕쇄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결국 정치군사적 이유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국민경제의 붕쇄상태는 물질 자원이 부족한 북한의 경제발전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1) 사회주의경제권이 붕괴하게 된 원인의 하나로서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자본주의세계경제체제의 외부적 구속력을 강조하는 관점으로는 윌러스타인(1992)과 이수훈(1993) 참조.

2) 북한 경제가 1970년대 일시적으로 선진자본주의국가와 맺었던 경제관계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3장 참조.

3)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실질적으로 일종의 경제붕쇄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핵문제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논의되면서 그리고 최근 북한식량난·대북식량지원과 관련하여 지적되기도 했었다.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에 대해서는 박종철(1994); 북한식량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1998) 참조.

요인이었다.

그러나 북한 경제가 처해 있던 역사적·상황적 제약은 북한의 경제위기에 대한 경제외적 요인이거나 국민경제 외부적 요인일 뿐이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북한의 경제위기가 북한이 원인으로 내세우는 '엄중한 국제적 사변들과 복잡한 사태'⁴⁾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면, 그리고 북한 경제위기의 기원이 이미 195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추진해 온 경제성장정책의 내부에 잠재해 있었다면,⁵⁾ 북한 경제위기의 원인을 북한 경제의 내부에서 그리고 경제적 요인에 기초하여 설명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작업의 하나로 북한의 경제이론, 경제(성장)정책, 경제성과를 검토함으로써 북한 경제위기를 경제학적으로 좀더 엄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논문의 2장에서는 북한 사회주의경제계획의 이론적 기초를 검토함으로써, 북한 경제체제가 근본원리의 차원에서 안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검토하고 있는 북한 경제체제의 근본원리는 경제발전과 관련한 북한의 경제이론, 특히 북한이 1990년대 초 발간한 주요 경제서적에서 완결된 형태로 제시된 이론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당연히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성과를 정당화하는 경향을 가지며 북한의 경제현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당화를 위한 담론의 성격을 지닌 북한의 경제발전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경제발전과 관련한 북한 지도부의 근본적인 오류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본 논문은 북한의 사회주의명령경제체제가 하나의 완결된 정치경제체제(유일체제)로서 갖는 사회제도적 한계에 대해서는 직접 다루지 않으려고 하였다.

북한 경제성장정책의 변천 과정을 다루는 3장은 북한이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채택하고 추진해 왔던 경제계획과 경제정책을 분석

4) 「중앙방송」(1993.12.9.06:10).

5) 김연철(1996) 참조.

한다. 네 시기로 구분하여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북한이 얼마나 자신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적절한 경제정책을 채택하였는지, 북한 경제정책이 얼마나 북한 경제이론과 일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북한 경제정책의 동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본 논문은 북한 지도부가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개방정책을 채택하지만 결국에는 주체사상이라는 경직된 체제지배이념, 유일체제라는 초권위주의적 정치사회체제, 자립경제와 불균형 발전을 중시하는 경제이론과 경제정책,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으로 일관된 경제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북한의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은 실패한 사회주의적 경제성장, 다시 말해 현재 북한 경제위기의 밑에 놓여 있는 주요한 요인이다. 그러면 과연 언제부터 북한 경제는 경제성과에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는가? 1990년대 북한 경제위기의 구조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과연 북한은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논문의 4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통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그리고 북한이 발표한 통계수치 자체의 정확성이 의심스러운 상태에서 북한의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제시되는 논문의 주장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의 심각한 북한 경제위기와 언젠가는 좀더 분명히 밝혀질 북한 경제발전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논문의 주장이 주요 맥락에 있어 현실과 크게 어긋나지 않음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⁶⁾

논문의 마지막 장에서는 북한의 경제이론, 경제정책, 경제성과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북한의 경제학과 경제현실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6) 사실, 제한된 사실정보를 가지고 현실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과학적 작업의 주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제한된 사실정보는 많은 경우 과학적 작업과정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북한 경제체제와 작동원리에서 유사성을 가지는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경험을 참조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건전한 추론작업을 벌이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주로 건전한 추론작업에 기초하여 북한 경제에 대한 평가를 내리려고 노력하였다.

사회주의 근대국민국가건설이라는 목표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원리를 제시하는 이론으로 등장한 북한의 경제학은 본래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경제현실의 변화를 제약하는 질곡으로 작용하였으며, 결국에는 경제현실과 경제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이 현존하는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⁷⁾ 본 논문은 북한의 경제현실과 경제학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전망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II. 북한의 사회주의경제발전이론

1. 자립적 민족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법칙

한반도에서 수립된 두 개의 국민국가 중의 하나인 북한은 자신의 대립자인 남한과 벌이는 끊임없는 체제경쟁 속에서 자신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사회주의근대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였다.⁸⁾ 하나의 국가로서 북한이 갖고 있던 이러한 존재규정성과 존재목표에 따라, 북한의 경제정책이 추구해야 할 기본 가치는 두 가지로 제시된다. 하나는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줄 북한 주민의 물질적 생활조건의 향상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 전체의 사회주의화를 추진해 갈 물질 기초가 될 인민대중의 자주성 나아가 민족경제의 자주성이다. 북한은 바로 이 두 가지 기본 가치를 구현하는 정책노선을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⁹⁾이라 규정하고 있

7) 북한 지도부에 대한 그리고 북한 당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북한 국민의 의식변화는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1998) 참조.

8) 분단체제하에서 북한은 국제적으로는 하나의 공식적 국민국가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규정된 남한과의 관계에서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치의식 또는 정당화의식 속에서는 북한은 통일을 반드시 존재완결성의 현실적 조건으로 추구해야만 하는 ‘의사’ 혹은 ‘절반의’ 국민국가일 뿐이다. 박순성(1994a) 참조.

다.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려는 북한에게 사회주의경제는 자본주의경제와 비교할 때 본질적인 우월성을 지닌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경제는 생산수단의 소유를 사회화하기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을 ‘목적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¹⁰⁾ 계획을 통하여 “인민경제부문간, 재생산의 고리들간, 생산의 제요소와 지역들을 비롯한 인민경제발전과 련관된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간의 경제적연계의 광적응관계”를 보장함으로써, 북한은 경제발전과정에서 물질적 생활조건의 다양한 측면을 고무 만족시키고 또한 경제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¹¹⁾ 달리 말하면,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은 사회적 생산구조 혹은 사회적 자원지출구조의 균형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국가가 자신의 사회적 수요를 자립적으로 충족할 수 있게 한다. 계획은 균형을 보장하고, 균형은 수요의 다양성을 충족하고 동시에 경제자립을 달성한다.

계획을 통하여 보장되는 균형은 궁극적으로 빠른 경제발전, 다시 말해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까지도 보장할 것이다. 여기에서 균형은 단순히 정확적 균형이 아니라 확대재생산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비교정확적 균형이다.¹²⁾ 비교정확적 균형은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 전제조건이며, 이런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적극적인 균형’이다.¹³⁾ 북한은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 공업과 농업, 사회적 축적과 소비, 국민 개개인의 소득

9) ‘경제건설’이라는 표현에서 ‘물질적 생활조건의 향상’을, ‘자립적 민족경제’라는 표현에서 ‘민족경제의 자주성’을 읽을 수 있다.

10) 사회주의경제에서 계획이 갖는 의미는 사회구성원들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일치,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산자들간의 관계와 생산과정들간의 연계의 직접성(곧 일관성과 통일성), 모든 경제활동들(생산, 분배, 유통, 소비)간의 따라서 모든 경제법칙들간의 통일성이다. 리기성(1992), pp.295~296.

11) 최중극(1990), pp.5~9. 동일한 내용의 주장은 리기성(1992), pp.331~332; 김원삼·한득보(1987) 5장 참조. 북한의 문헌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북한의 표기법에 따랐다.

12) 여기에서 우리는 ‘동학적 균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비교정확과 동학에 대한 개념규정은 Schumpeter(1954), pp.494~496 참조.

13) 리기성(1992), p.213.

과 소비, 이 모든 대응범주들간의 균형을 보장함으로써, 민족경제의 확대재생산이 경제구조 내부에서 혼란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¹⁴⁾ 그러나 균형이 그 자체로 높은 속도를 보장할 것이라는 명제는 자명하지 않다. 따라서 북한은 균형과 높은 속도의 관계를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 정의하고, 높은 속도(목적)를 달성하기 위하여 균형(수단)을 조정할 필요를 강조한다.¹⁵⁾ 이제 사회주의계획경제는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균형을 조절하는 경제체제로 규정된다.

결국 균형과 속도의 관계는 한편으로는 전제조건과 결과의 관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이다. 균형은 속도에 대해 한편으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위치에 놓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위치에 놓인다. 따라서 균형과 속도간의 관계를 조정할 기구가 필요하며, 이는 곧 '사회적 수요, 인민들의 수요'이다.¹⁶⁾

북한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에 따르면, 사회적 수요의 충족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산, 분배, 유통, 소비와 관련한 기본 법칙이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이다.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은 "사회주의적생산의 최고목적의 더욱더 완전한 실현을 위한 생산부문들의 합리적인 균형구조, 사회총생산물의 가장 적합한 구조를 예견하면서" 인민경제균형의 방향과 기준을 규정한다.¹⁷⁾ 여기에서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에 따라 규정되는 인민경제균형의 방향과 기준이 곧 사회주의경제발전의 기본방식,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법칙이다. 그리고 인민경제계획화 자체는 개별 국민경

14) "만약 경제발전에서 올바른 균형이 보장되지 못하면 인민경제의 높은 장성속도는 보장될수 없을뿐아니라 인민경제부문간의 경제적연계는 파괴되고 막대한 자재, 로력의 낭비를 가져오며 경제발전은 혼란에 빠질수 있다." 최중극(1900), p.7.

15) 리기성(1992), 7장 2절 참조. "속도와 균형과의 관계에서는 속도가 목적이고 균형은 그를 위한 수단이라고 볼수 있으며, ..." 따라서 "높은 속도의 요구에 맞는 균형의 설정이 필수적인것으로 된다." 리기성(1992), p.213 & p.212.

16) 리기성(1992), p.214.

17) 리기성(1992), p.216.

제가 안고 있는 객관적 조건에 해당하는 인적·물적 자원과 정치·경제·군사적 과제에 맞추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다.18)

2. 경제발전의 균형성, 혹은 인민경제균형구조의 조화로운 발전

인민경제의 빠른 발전은 사회적 수요에 따라 사회적 생산구조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급속하게 확대되는 것이다.19)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발전은 균형에 기초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균형은 단순히 개별 범주들간의 균형을 의미하지 않는다. 빠른 경제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사회적, 전인민경제적 범위에서 부단히 이루어지는 다양한 균형들사이의 적용과 조화”, 경제발전의 균형성이 필요하다. “균형성은 개별적인 균형들을 전제로 하지만 균형개념자체와 같은것은 아니다.”20) 여기에서 균형성과 균형의 구분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개별 경제부문의 균형과 구분되는 경제전체의 균형을 강조함으로써 경제발전이 갖는 총체적 의미를 부각시키려고 한다. 둘째는 경제발전의 균형성이란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 경제전체의 균형을 의미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론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균형과 속도라는 두 개념 사이의 순환적 논리구조를 극복하려는 이론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21)

18) 북한의 경제학 체계에 대해서는 박순성(1997) 참조.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법칙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서는 리기성(1992), p.322 참조.

19) “사회적수요구조와 사회적생산구조의 호상작용은 인민경제균형성의 기초이다.” 리기성(1992), p.309.

20) 리기성(1992), p.308.

21) 그러나 북한의 경제발전이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속도와 균형간의 순환적 논리구조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은 ‘적극적 균형’이라는 개념으로 논리적 순환성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이는 균형을 전제조건, 속도를 결과로 보는 관점에서 이미 사용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이론 자체를 모호하게 만든다. 이론적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논리적 순환성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정치적 이유로 감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순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균형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여야 한다. 균형은 우선 순수하게 재생산도식에 의해 분석될 수 있는, 확대재생산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생산의 2대 부문간의 논리적·기계적 균형을 의미한다(이 개념이

그러나 경제발전의 균형성과 개별 경제범주의 균형이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경제발전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양한 개별 경제 범주의 균형들 중 어떤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어떤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은 사회주의경제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균형으로 사회총생산물에서 보상품드와 국민소득간의 균형, 사회적 생산구조에서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간의 균형, 공업과 농업간의 균형, 축적과 소비간의 균형, 생산·분배·수요간의 균형, 기술과 생산조직의 발전에 따른 생산요소들간의 균형 혹은 기술발전과 생산간의 균형,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간의 균형, 사회주의재생산과 사회적·생산적 기초시설간의 균형, 경제발전에서 지역간의 균형을 들고 있다.²²⁾ 그런데 경제발전이란 궁극적으로 확대재생산, 곧 현재의 경제규모보다 미래의 경제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북한은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을 추구하므로, 발전이론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확대재생산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축적과 소비간의 균형, 그리고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간의 균형이다.

먼저 축적과 소비간의 균형은 생산물 분배의 측면에서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을 규제한다. 국민소득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된 축적과

공황과 자본주의 붕괴를 둘러싼 로자 룩셈부르크와 레닌의 논쟁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다). 균형의 다른 하나의 의미는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균형, 즉 인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균형이다. 경제발전의 속도와 관련되는 개념은 논리적·기계적 균형일 뿐이지만, 북한은 사회적 수요와 사회적 생산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함으로써 균형이 갖는 다른 하나의 의미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런데 사회적 수요란 인민들의 욕구와 생활조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곧 사회적 생산구조에서 경공업과 농업의 중요성과 연결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북한의 선행경제부문우선발전법칙, 중공업우선성장정책에 대한 비판에 직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속도와 균형의 논리적 순환성은 정치적 위험성 때문에 명확하게 인식되지 못한다. 다른 어느 사회과학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에서도 과학성에 대한 최대의 적은 정치적 혹은 정치적 이유로 인한 의식적·무의식적 자기검열이다.

22) 최중극(1990), "3장 사회주의경제의 중요균형" 참조.

소비간의 균형은 사회순소득에서 확대재생산을 위한 소득분과 현재의 소비를 위한 소득분간의 균형을 의미한다. 곧 “축적이란 국민소득의 일부를 리용하여 확대재생산을 위한 밑천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²³⁾ 여기에서 당연히 현재의 소비와 확대재생산을 위한 축적간의 적절한 균형은 인민의 복리증진과 빠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사회주의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지 않을 수 없다.²⁴⁾

북한은 축적과 소비간의 균형과 관련하여 “축적을 우선적으로 빨리 늘이면서 소비를 동시에 늘이는것”을 근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소득의 분배에서 축적몫을 선차적으로 규정하고 축적장성률을 앞세우면서 소비의 장성이 축적의 속도에 가까이 접근하여나가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²⁵⁾ 결국 축적이 소비에 우선하면서, 경제발전의 결과에 맞추어 소비가 증대되어야 하는 것이다.²⁶⁾

그런데 이러한 축적과 소비 사이의 균형은 두 가지 경제적 조건에 맞추어 조절되어야 한다. 첫째 조건은 축적과 소비의 실질적 대상이 되는 생산물의 구성이다.²⁷⁾ 이 문제는 아래에서 다룰 것이다. 둘째 조건

23) 리기성(1992), p.346.

24) “축적과 소비와의 균형을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앞날의 리익을 고려한다 하여 축적만 지나치게 한다면 인민들의 당면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없습니다. ... 이와 반대로 인민생활을 높인다고 하여 소비만 하고 축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안됩니다. 확대재생산을 위한 밑천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것을 다 때려먹기만 한다면 나라의 경제는 더 발전할수 없을것입니다.” 김일성(1965), p.446.

25) 리기성(1992), p.348. 이 원칙은 북한의 모든 경제관련 저작에서 반드시 언급되고 있다. 한편 이론적으로 축적확대의 속도에 소비확대의 속도가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모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검토하지 않겠다.

26) 여기에서도 앞에서 말한 속도와 균형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애매성 혹은 긴장이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 축적과 소비의 균형은 빠른 경제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축적, 그리고 이러한 축적을 가능하게 해 주는 소비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간의 선호차원의 균형을 의미하지 않는다.

27) “그것은 축적이나 소비가 다 현물적으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축적фон드는 주로 생산수단과 일부 소비재로써 구성되며 소비фон드는 주로 소비재로써 구성되기때문에 축적과 소비의 균형은 사회적생산의 2대부류인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사이의 균형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호상작용한다.” 리기성(1992),

은 국민소득 성장의 주요 요인이 되는 사회적 노동생산성(사회적으로동생산능률)과 개인적 소비폰드에 의해 결정되는 평균생활비상승(평균생활비장성) 사이의 관계이다. 이 문제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할 물질 인센티브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다. 결국 이렇게 볼 때, 축적과 소비의 균형은 미래 이익과 현재 이익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이익과 개인 이익의 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축적의 강조는 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개인이익보다는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사회이익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결과를 자연스럽게 낳는다.

축적과 소비의 실질적 대상이 되는 생산물의 구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인인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간의 균형이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갖는 경제적 의미는 사회적 생산구조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파악해 볼 수 있다.²⁸⁾ 경제활동의 하나로서 생산활동은 인간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을 대상으로 노동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생산활동은 사회경제적 의미와 기술경제적 의미를 지닌다. 한 사회에서 자연-생산-사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사회적 생산체계 혹은 생산구조도 역시 기술경제적 관계와 사회경제적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바로 이 두 관점에 주목하면서 사회적 생산구조를 바라보면, 생산구조는 “생산의 요소별 구조—부문별 구조—생산물구조—수요구조의 체계”로 파악되며, 첫 두 고리는 생산영역의 구조로, 마지막 두 고리는 소비영역의 구조로 볼 수 있다. 한편 생산적 소비와 비생산적 소비라는 맑스의 구분에 기초하여 보면,²⁹⁾ 한 사회의 수요구조는 사회적 수요의 성격에 따라 생산수단에 대한 수요와 소비재에 대한 수요로 분할된다. 이는 곧 생산물의 구조가 생산수단과 소비재로 이루어지고 있

p.347.

28) 이 부분의 논의는 한득보(1992), “4장 자립적인 사회주의적생산구조, 인민경제의 주체화”에 주로 의존하였다.

29) Marx(1977) 참조.

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지적할 점은 생산활동의 결과에 해당하는 생산물구조가 생산의 요소별 구조와 부문별 구조와 직접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이다. 특히 생산수단 자체의 구조는 생산의 요소별 구조와 부문별 구조의 기능과 발전의 구조와 직결된다. 결국 생산수단과 소비재로 구성되는 생산물 구조는 사회적 생산구조에서 핵심적인 작동을 하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에 따르면,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의 균형은 맑스의 재생산도식을 이용할 경우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³⁰⁾ 사회의 총생산물을 현물형태의 관점에서 보면 생산수단과 소비재로 구분된다. 그런데 축적과 소비의 균형과 관련하여 이미 지적한 것처럼 “확대재생산을 위해서는 사회를 위한 생산물의 일부가 축적에 돌려져 추가적인 생산фон드와 추가적인 로동력의 인입과 관련된 생활비фон드로 이루어지므로 추가적인 생산수단 즉 동일한 규모에서의 재생산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크기를 초과하는 여분의 생산수단이 미리 생산되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추가적인 로동력의 보장과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소비재가 더 생산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확대재생산이 전개되기 위한 물질적전제를 이룬다.”³¹⁾

아래에서 확대재생산의 조건을 수식으로 검토해 보자. I 부문(부류)은 생산수단생산부문이고, II 부문은 소비재생산부문이다.³²⁾ 먼저 각 부문의 불변자본(C), 가변자본(V), 잉여생산물(M), 총생산물(W)을 가치의 합으로 나타내면, <식1>, <식2>와 같다. 식에서 M_c , M_v 는 불변자본 축적분(생산적 고정фон드에 투하되는 부문), 가변자본 축적분(노동력의 이용에 투하되는 부문), M_a 는 소비분이며, M_c 와 M_v 의 합이 총축적분

30) 맑스의 재생산도식에 대해서는 맑스, 「자본론」 2권 참조. 재생산도식에 기초하여 확대재생산의 조건을 분석하는 기법에 대한 간단한 해설로는 Sweezy(1956), 10장 참조. 한편 이하의 논의는 최중극(1990), 4장 2절에 의존하였다.

31) 최중극(1990), p.37.

32) 이하의 논의는 최중극(1990), pp.37~39를 참조하였으며, 본문에서는 북한의 표기법을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한득보(1992), 14장 참조.

이다.

$$I \text{ 부문 } C1 + V1 + Mc1 + Mv1 + Ma1 = W1$$

<식1>

$$II \text{ 부문 } C2 + V2 + Mc2 + Mv2 + Ma2 = W2$$

<식2>

두 식을 바탕으로 확대재생산이 각 부문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진행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면, <식3>, <식4>와 같다.

$$C1 + V1 + Mc1 + Mv1 + Ma1 = C1 + C2 + Mc1 + Mc2$$

<식3>

$$C2 + V2 + Mc2 + Mv2 + Ma2 = V1 + V2 + Mv1 + Mv2 + Ma1 + Ma2$$

<식4>

각 부문에서 내부교환을 제외하면, 확대재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생산 부문과 소비재생산부문간 균형조건은 <식5>와 같다.

$$C2 + Mc2 = V1 + Mv1 + Ma1$$

<식5>

부문간의 균형조건에 대해, 북한의 정치경제학은 I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확대재생산의 전제조건에 따라 사회적 생산의 제 I 부류에서의 축적에 달려지는 몫이 먼저 결정되며 다음으로 그에 의존하면서 사회적생산의 부류들간의 균형을 유지할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킬수 있도록 사회적생산의 제II부류의 축적이 결정된다.”³³⁾

33) 최중극(1990), p.35.

덧붙여, “사회적생산의 제 I 부류의 우선적장성이 무엇보다도 사회적생산의 제 I, II 부류 즉 생산수단생산부문과 소비재생산부문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을 보상하고 생산규모의 확대와 기술적진보의 요구에 의하여 제기되는 생산적고정фон드의 갱신확대를 보장하며 동시에 생산수단에 대해 대외수출의 요구와 예비조성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그 장성속도가 이루어져야 한다.”³⁴⁾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해석은 맑스의 재생산도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이미 많은 저자들이 지적하였듯이 맑스의 재생산도식은 현물형태의 교환(유통)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가치형태의 교환과 관련된 것이다. 재생산도식에서 나타난 확대재생산의 균형조건은 노동시간으로 측정되는 각 부문의 개별 가치가 균형확대재생산을 위해 맺어야 할 상관관계의 특징과 연관되어 있지, 결코 확대재생산을 위한 부문별 총생산물간의 물적 형태상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주지는 못한다.³⁵⁾ 확대재생산의 균형조건과 관련한 재생산도식은 오히려 가치형태로 계산된 국민소득의 생산부문별 배분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북한의 정치경제학이 제시하는 경제발전이론은 우선 국민소득에서 축적분³⁶⁾이 우선적으로 증대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생산수단생산부문과 소비재생산부문이 일정한 균형관계를 맺으면서도 생산수단생산부문이 우선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번째 주장의 근거로서 제시되는 맑스의 확대재생산도식은 적절한 논거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생산수단생산부문의 우선 성장에 관한 주장은 사회적 생산의 부문별 구조(산업구조)에 대한 연관관계분석이나 사회적 생산과정의 물질적·기술적 구조(생산구조)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직접 도출될 수 있다.³⁷⁾

34) 최중극(1990), p.39.

35) 이와 관련한 대표적 논의로는 김수행(1988), 4장; Sraffa(1960); Salama(1982); Cartelier(1991) 참조.

36) 이는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 국민소득 중 투자로 돌아가는 부분에 다름 아니다.

부문별 구조의 분석에 따르면, 생산수단생산부문은 노동수단생산부문과 노동대상생산부문으로 나뉜다.³⁸⁾ 특히 노동수단은 “생산수단의 핵심적부분이며 생산의 골근체계를 이룬다.” 나아가, “노동수단은 구조적으로 노동수단생산을 위한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생산을 위한 노동수단 그리고 소비재생산을 위한 노동수단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근본을 이루는것은 노동수단생산을 위한 노동수단이며 그의 량적 및 질적 발전은 노동수단의 전반적인 발전과 나아가서 인민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노동수단생산부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부하여보면 ... 노동수단생산의 모체인 공작기계생산부문과 노동대상을 생산하는 노동수단부문들”로 나뉘어진다.³⁹⁾ 여기에서, 북한의 정치경제학은 기술적 진보와 확대재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공업의 핵심인 노동수단생산 즉 기계설비생산의 발전속도와 그 질적수준”이라고 규정한다.⁴⁰⁾ 결국 북한은 생산물구조를 분석하는 재생산도식으로부터는 확대재생산과 관련한 I 부문과 II 부문의 균형에 대한 논리만을 끌어낼 수 있을 뿐이며, 생산수단생산, 그중에서도 공작기계생산을 담당하는 중공업의 우선성장원리는 부문별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끌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역설적이지만 북한 경제발전정책과 관련한 주요한 하나의 원칙이 도출된다. 북한의 정치경제학에 따르면 부문별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중공업우선성장정책의 원리가 도출되고, 재생산도식으로부터 확대재생산을 위한 균형조건이 도출된다. 이제 만일 중공업우선성장정책에 따라 중공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증대되어야 한다

37) 리기성(1992), 12장 참조.

38) 맑스는 생산수단을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으로 나눈다. 맑스(1989), 7장 참조.

39) 노동대상을 생산하는 노동수단부문들은 “... 예컨대 채취공업부문의 노동수단을 생산하는 부문과 채취공업에서 생산된 노동대상을 가공하는 생산부문의 노동수단생산부문 또는 농촌경리발전을 위한 트랙토르, 각종 농기계를 생산하는 부문들과 농촌경리에서 생산된 농업생산물을 가공하는 노동수단을 생산하는 부문 등으로 이루어진다.” 최중국(1990), p.41.

40) 최중국(1990), p.41.

면, 확대재생산을 위한 부문별 균형조건에 따라 축적분은 우선적으로 생산수단생산부문에 배분되어야 하며 동시에 소비재생산부문에 잉여가 생산수단생산부문에 유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⁴¹⁾ 그리고 이는 결국 농업과 경공업에 포함한 소비재생산부문의 성장이 일정 기간 중 공업을 포함한 생산수단생산부문의 성장보다 지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북한은 사회적 생산의 부문별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선행경제부문의 성장이 선행되어야 함을 도출하고 있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은 그 사명과 경제기술적특성으로 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그의 발전을 앞세워야 하는 부문들이다. 선행부문은 사회적생산순환에서 언제나 앞서 발전하면서 다른 부문들의 발전을 위한 근본조건을 마련해준다. 여기에는 채취, 전력 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과 교통운수 부문 등이 포함된다.”⁴²⁾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의 경제발전이론은 경제발전의 균형성, 다시 말해 인민경제균형구조의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생산구조의 사회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기술경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면서 축적과 생산수단생산이 소비와 소비재생산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발전의 균형성에 대한 자신들의 표면상 강조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보다는 불균형발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재생산도식상의 균형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인민생활 전반과 관련한 균형을 추구하고는 있지 않은 것이다. 이

41) 북한은 이를 부문간 경제관계에서 작동하는 ‘직접적인 비등가적 형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리기성(1992), p.312.

42) 리기성(1992), p.358. 북한의 정치경제학은 선행경제부문의 주요 특징으로 생산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 사회적 생산과 순환에서 첫 공정이라는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선행경제부문의 중요성은 생산과 건설의 정상화에 기여하며 경제토대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점,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강화한다는 점, 인민들의 사회주의생활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것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에 있다. 리기성(1992), pp.359~365.

러한 불균형발전은 사회적 생산구조의 자립화와 선진화를 최고의 목표로 삼으면서, 선행부문을 포함한 중공업부문의 성장에 사회적 자원을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⁴³⁾

3. 사회주의적 생산의 집약적 발전

북한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이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다루는 문제중의 하나는 과학기술의 경제적 활용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생산의 집약적 발전이라는 과제이다.⁴⁴⁾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은 우선 생산발전의 조방적 방법을 투입요소의 양적 증대에 기초한 생산증대로 파악한다. 생산발전의 집약적 방법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술장비·기술공정의 개선, 근로자의 생산기술기능의 제고, 생산방법·노동조직·경영활동의 합리화와 같은 기술경제적 측면에서의 질적 변화에 기초한 생산발전방법이다.⁴⁵⁾ 이처럼 생산발전의 집약적 발전은 기술발전에 주로 의존한다는 측면에서 조방적 방법과 구분되지만, 축적에 기초한 확대재생산 과정에서는 조방적 방법과 결코 분리되어 일어나지 않는다. 생산발전의 두 방법은 오히려 동시에 일어나며, 적절한 상호

43) 북한은 균형을 강조함으로써 경제발전에서 지역간의 균형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역시 정치경제학적 담론의 원리천명 차원에 머무르고 만다. 한편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산업연관분석에 기초한 경제발전이론과 경제계획론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이 역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선행경제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고 만다. 최중규(1990), 6장; 리동준(1992) 참조.

44) 한독보(1992) 2편의 주제는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의 합법칙성'이며, 다루는 세 주제는 자립적인 사회주의적 생산구조(인민경제의 주체화, 4장),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의 법칙(5장), 사회주의적 생산의 집약적 발전(인민경제의 현대화·과학화의 추진, 6장)이다. 본 절의 제목은 여기에서 따왔으며, 논의는 2편 6장에 주로 의존하였다.

45) 북한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은 조방적 방법과 집약적 방법을 폰드용량적 생산형과 폰드절약적 생산형에 일치시키거나, 노동자수와 노동생산능률문제로만 보는 견해를 부정한다. 북한이 강조하는 점은 두 방법이 세 가지 생산요소(노동수단, 노동대상, 노동력)의 양적·질적 변화와 요소들의 기능적 결합관계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한독보(1992), pp.239~240.

관계를 맺으면서 작동한다.⁴⁶⁾ “생산의 조방적장성의 유일한 원천인 축적은 생산요소들의 질적개선과 그것들의 기능제고에 의하여 마련된다.” 또한 “생산장성의 집약적방법의 기능과 발전의 전제로, 조건으로 되는 것은 생산의 조방적인 확대방법이다.” 그 결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 방법간의 일정한 균형, “생산의 일정한 질적장성에 기초하여 량적장성을 예견하는 것”이다.⁴⁷⁾ 결국, 생산발전의 집약적 형태는 “조방적형태의 외피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은 경제발전의 이상적 형태를 ‘생산의 집약적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⁴⁸⁾

생산의 집약적 발전은 두 계기에 기초한다. 첫째는 생산의 확대과정에서 조방적 방법과 집약적 방법이 결합되지만, 생산요소의 질적 변화에 따른 성장분이 양적 증대에 따른 성장분보다 큰 방식으로 추진되는 발전방식이다. 둘째는 과학기술의 진보속도에 상응하는 발전방식으로 생산요소들의 질적 수준 상승이 첨단기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때이다. 두 계기의 구분은 다소 모호하지만, 북한의 정치경제학은 이에 기초하여 집약적 발전의 두 단계를 구분한다. 첫 단계는 “기계화에 의한 손로동의 대대적인 교체와 절약이 기본으로 되는 단계”이다.⁴⁹⁾ 이 단계

46) “생산발전의 조방적방법과 집약적방법은 그자체의 고유한 특성으로 하여 서로 구별되지만 목적과 결과, 생산의 량적장성과 질적장성의 견지에서 분리될수 없는 통일을 이룬다. 이 통일은 생산의 량적장성이 질적변화를 동반하며 질적변화가 새로운 량적장성을 가져오는 관계에서 나타난다.” 한독보(1992), pp.238~9.

47) 한독보(1992), p.239, p.241.

48) “생산장성의 두 방법의 호상관계와 관련하여 사회주의적생산의 집약적발전에 대한 정확한 리해문제가 나선다. 순수한 집약적방법에 의한 생산발전이 있을수 없고 또 그 방법이 일정한 계기에서 조방적장성의 계기로 되는만큼 생산의 집약적 발전은 집약적방법에 의한 발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일단 형성된 집약적발전방식이 항구적인것으로 되는것도 아니다.” 한독보(1992), p.243. 그러나 북한의 정치경제학은 때로는 ‘생산의 집약적 발전’이라는 개념과 ‘생산(혹은 생산장성)의 집약적 방법’이라는 개념을 혼동해서 쓰기도 한다.

49)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은 첫 단계를 다시 두 형태로 구분한다. 첫 형태는 기계의 도입에 따라 노동력과 기계의 결합이 높아지면서 생산증대의 조방적 방법이 극복되는 형태이다. 둘째 형태는 “대대적인 기계화로 물질생산영역안에서 보충적인 로력예비가 형성되면서 로동생산능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형태”이다. 한독보(1992), p.246.

에서 “중로동, 유해로동, 무기능로동과 기능이 낮은 로동”은 사라지고,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도 없어진다. 두 번째 단계는 “생산의 모든 요소들의 질적 개선과 리용수준제고에 의한 생산장성이 기본으로 되는 단계,” 생산의 종합적 기계화와 자동화가 실현되는 집약적 발전의 전면적 단계이다.⁵⁰⁾ 또한 북한은 이 두 단계를 각각 기계-공장식기술방식, 체계-자동화방식이라는 기술체계에 대응시키고 있다.⁵¹⁾

북한의 정치경제학은 북한 경제의 현 단계를 집약적 발전의 두 번째 단계 내지는 첫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전환하는 시기로 파악하고 있다.⁵²⁾ 따라서 북한은 집약적 발전에 작용하는 요인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경제정책의 기본 과제를 제시한다. 집약적 발전에 작용하는 첫째 요인은 과학기술진보의 촉진과 관련된 요인으로, 생산물의 기술적 수준과 질의 제고, 생산기술공정의 개선, 부문구조의 완비, 축적의 효과성 제고 등이다. 둘째 요인은 생산적 폰드와 자원이출의 절약과 관련된 요인으로, 생산·노동조직의 개선과 노동생산능률의 제고, 고정폰드의 이용률 제고, 생산물의 각종 용량의 저하, 자연자원의 종합적 이용 등이다. 마지막 요인은 생산경영활동의 과학화와 관련된 요인으로, 경영활동에서 생산자들의 주인다운 역할 제고, 계획화 수준의 제고, 관리체계의 방법의 완성, 독립채산제의 정확한 실시 등이다.⁵³⁾

북한은 이와 같은 집약적 발전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1960년 이후

50) 한독보(1992), p.247. 이 단계 역시 낮은 형태와 높은 형태로 구분한다. 낮은 단계는 ‘생산의 폰드용량’이 증가해야만 하는 단계이며, 높은 단계는 ‘폰드용량’이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단계이다.

51) 한독보(1992), p.231.

52) “생산에서 아직 손로동이 적지않은 오늘의 조건에서는 집약적발전에서 비록 그것이 폰드용량의 장성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보다 많은 현대적기계기술수단에 의한 생산의 종합적기계화, 자동화의 추진이 절박한것으로 된다.” 한독보(1992), p.247.

53) 한독보(1992), p.248. 현재 북한은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 특히 생산기술적 잠재력의 효과적 이용, 사회생산물생산구조의 개선, 근로자의 전문지식과 기술기능수준의 상승을 중시한다. 한독보(1992), pp.247~249.

부터는 경제계획의 주요 목표로 기술혁명, 독립채산제 강화에 기초한 절약과 예비의 증대, 경제의 과학화·현대화, 경제관리제도의 변화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III. 북한 경제성장정책의 변천 과정

북한의 경제발전이론은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장점을 강조한 후 민족경제의 자립화와 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 북한 경제정책의 핵심 내용은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제도화,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동원·배분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중반부터 북한 지도부는 사회주의 공업화를 추진하는 핵심방안으로 중공업·선형경제부문에 대한 집중 투자를 강조하는 동시에 대중노선에 기초한 사회적 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동원방법을 강구하려고 하였다. 그 후 북한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경제발전의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된 1970년대부터 집약적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혁명과 경제의 과학화·현대화를 강조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북한 경제정책의 큰 흐름에 기초하여 해방 이후 현재까지 북한 경제성장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보면, 북한 경제성장정책은 주요 목표와 정책의 선택에 따라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고찰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네 시기동안 북한 경제성장정책의 변화를 검토할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주요 문헌인 김일성·김정일의 저작, 조선중앙년감, 경제 관련 잡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주요 정책들이 이미 195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시기별로 강조되었던 경제정책의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해 내고 시기별로 특성화시키는 작업보다는 이미 반세기가 넘는 북한의 경제사에

서 경제정책의 중요점들이 대체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⁵⁴⁾

1. 민주개혁과 전쟁경제 1945~1953

해방 후 북한 지역에서 권력을 잡기 시작하면서 김일성은 민주적 개혁을 통하여 북한 지역에서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⁵⁵⁾과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만들려고 하였다.⁵⁶⁾ 이러한 전략에 기초하여 북한 사회를 완전히 장악한 후 남한 사회에서 변혁의 기운이 확보되자, 북한 지도부는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보장받은 다음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위한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국제전으로 발전하고, 북한의 의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한국전쟁은 북한 전역에 걸친 사회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 형성과 관련해서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전쟁체제를 통해 북한 지도부는 중앙집중적인 경제체제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54) 이 문제는 특히 북한에서 개별 주요 정책들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정책의 역사적 기원과 관련되어 있다. 기원의 문제는 분명 중요하다. 그렇지만 북한의 역사가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다시 쓰여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북한의 경제 관련 문헌들이 빠짐없이 필자의 눈앞에 놓여있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원의 문제를 명확하게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북한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흐름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강조되었는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데 만족하려고 한다.

55) 민주적 개혁을 통한 사회적 기반 형성은 북한 지역 인민들에게서 김일성 집단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에 있던 사회민주적 세력, 민족주의적 세력을 자신들에 대한 우호세력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통일전선 개념이다. 김일성(1945), p.487.

56) “현단계에 있어서 우리 당의 정치로선은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과의 연합의 기초우에서 우리나라에 통일적민주주의정권을 수립하며 북조선을 통일된 민주주의적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강력한 민주기지로 전변시키는 것입니다.” 김일성(1945), p.487.

민주개혁과 인민경제건설

북한 지역을 '통일된 민주주의적 독립국가 건설'의 기지로 만든다는 전략에 기초하여, 북한 지도부는 사회주의적 근대국민국가를 북한 지역에 건설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이 추구한 정책의 주요 내용은 김일성이 1946년 3월 발표한 「20개조 정강」에 잘 나타나 있다. 일종의 민주개혁에 해당하는 북한 정책의 주요 내용은 일제 식민지의 완전 청산, 민주적 기본권리의 보장, 복리 향상을 위한 산업화, 사유권 보장과 생산수단의 국유화, 소작제 철폐와 토지의 무상 분배, 생필품 가격 안정, 8시간 노동제 및 최저임금제, 사회보험·무료치료·의무교육 실시 등이다.⁵⁷⁾

북한은 1946년 3월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6월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에 대한 결정서」, 8월 「임시인민위원회의 산업·교통·운수·체신·은행 등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고, 사회경제체제의 개혁을 추진한다.⁵⁸⁾ 한편 북한은 1947년부터 제1차 1개년계획(1947), 제2차 1개년 계획(1948), 인민경제 2개년 계획(1949~1950)을 설정하고, 공업·농업 분야의 기술 향상을 통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려고 노력한다. 이와 같은 개혁조치들은 북한 지역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북한은 농업과 공업 분야에서 상당한 실적을 올리게 된다.⁵⁹⁾

전쟁경제

북한은 약 4년에 걸친 사회경제체제개혁과 인민경제건설을 통해 북한 지역의 경제를 사회주의화하는 데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북

57) 김일성(1946), pp.125~127.

58) 이에 대한 개략적 설명으로는 고승효(1993), pp.33~44 참조. 북한법에 대해서는 정경모·최달곤 편(1990) 참조.

59) 조선중앙통신사(1949), pp.99~125; 통일원(1996) 참조.

한의 이러한 개혁조치들이 완전한 사회주의제도의 확립을 추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중점은 생산의 확대에 주어졌다.⁶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북한의 사회경제체제 전체를 중앙집중적 국가관리체제로 전환하는 주요한 계기가 된다. 북한은 공업분야에서 노동의 이동을 완전 통제하고, 농업분야에서 노력동원과 공동작업대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쟁 기간동안 사영상공업은 몰락하고 지주·부농·사영상공업자는 남한으로 이주하였다. 한국전쟁은 북한 경제 내부에서 사회주의체제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이후 북한은 전쟁 기간 동안의 변화에 기초하여 전후에 좀더 용이하게 중앙집중적 명령경제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2. 인민경제재건과 사회주의공업화, 1953~1970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말까지 북한 경제정책의 핵심 내용은 전후 경제의 재건, 경제체제의 사회주의화, 중공업중심의 공업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행 추진이다. 이러한 정책추진을 통해 북한은 궁극적으로 인민경제를 자립시키고 남북한 체제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였다. 특히 남북한 체제경쟁과 관련하여 북한은 1960년대 후반부터 철저한 경제건설·국방건설병진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왔다. 이 시기동안 북한은 경제체제의 사회주의화와 공업화에서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판단되지만, 명령에 기초하여 사회적 자원을 대량동원하는 사회주의적 명령경제체제의 한계를 이미 드러내 보이기 시작하였다. 사실 이 기간동안 북한은 「5개년계획」(1957~1960)의 조기 목표달성에도 불구하고 중공업우선성장정책에 기초한 경제발전계획이야기한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한 차례의 완충기(1960년)를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1차 7개년계획」(1961~1967년)을 3년이

60) 서남원(1966), 3장 참조.

나 연장하여야만 했다.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중공업우선성장정책

전후 북한 지도부는 경제 복구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농업의 협동화와 사영상공업의 사회주의화를 채택하였다. 사회주의화는 피폐한 전후 경제상황에서 북한 사회 내부의 자원을 국가가 직접 동원하고 자본축적을 강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었다.⁶¹⁾ 195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농업의 협동화와 사영상공업의 사회주의화는 1950년대 후반에 달성되었다.⁶²⁾

한편 이 시기 북한 지도부 내에서는 경제의 사회주의화와 중공업중심의 경제발전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이는 권력투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논쟁의 핵심은 투자자원이 원조를 통해 보장되는 상황에서 농업의 협동화를 어느 정도의 속도로 추진하며 자원배분을 어디에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었다.⁶³⁾ 논쟁은 1956년말 김일성이 주장하는 중공업우선성장노선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후 북한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완전히 중공업중심의 공업화전략으로 귀착되었다.⁶⁴⁾

61) 사후적 정당화에 불과하지만, 고승효의 주장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심하게 파괴되어 노동력이나 축력·농기구 등이 전면적으로 부족한 조건하에서 소농경영으로는 농업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는 것도, 전후 곤란했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기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궁핍에 빠진 농민생활 특히 전시중에 급증한 빈농(정전 당시 총농가 호수의 약 40%로 중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했고 또 전후 급속한 복구발전이 예견된 사회주의 공업과의 균형적 발전도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협동화할 수밖에 없었다." 고승효 (1993), p.58.

62) 사회주의화의 결과를 총괄해 둔 자료로는 趙鳳彬(1992), p.8. 농촌의 협동화 과정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은행 조사부(1995) 참조.

63) 이 시기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 들어온 원조의 규모는 아래 <표 2> 참조.

64) 이와 관련해서는 김연철(1996), 박순성(1996) 참조.

북한은 중공업중심의 공업화전략이란 '중공업 즉 생산 수단의 생산 부문이 인민 경제 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농업 생산에 비한 공업 생산의 빠른 발전"과 "경공업에 비한 중공업의 보다 빠른 성장"을 경제정책의 우선 목표로 설정한다.⁶⁵⁾ 좀더 구체적으로 북한은 금속공업, 유색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석탄공업, 화학공업, 건설사업의 우선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중공업우선성장정책과 관련하여 이 시기에 주요한 문제로 등장하는 것은 북한경제의 자주성 확립이다. 자주성 확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였다. 첫째는 사회주의적 국제분업과 경제적 자주성간의 관계이다. 북한은 양자간에 모순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공업에서 선진 기술의 도입이 소련과 인민민주주의국가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⁶⁶⁾ 둘째는 투자 자원의 원천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이전까지 북한의 경제발전에서 주요한 자금원천이 되었던 것은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 이루어지는 원조였다. 그러나 점차 원조가 차관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북한은 공업화를 위한 자금원천으로서 "국유화된 공업, 국가 독점적 대외 무역, 국영 상업 및 은행 체계의 수입"을 강조한다. 아울러 북한은 인민경제 전체에서 자원의 절약과 예비의 최대한 확대·활용을 통한 투자자원의 축적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동시에 천리마운동을 통한 대중동원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⁶⁷⁾

65) 김상학(1956), pp.46~47. 또한 이미 2장의 분석에서 예견되듯이, 북한은 이러한 정책의 이론적 기반으로 맑스의 재생산도식과 레닌의 이론을 든다.

66) "오늘 우리 나라 공업 부문에서 가동 기계 설비 대수중 최근 수년래 소련 및 인민 민주주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최신 선진적 기계 설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공작 기계에 관하여서는 기계 제작 공업 기업소의 대부분이 九十一-九八%에 달하며 대부분 중요 광산의 착암기에 대하여서는 九十% 이상에 달하고 있다." 김상학(1956), p.53.

67) 김상학(1956), pp.57~58. 소련이 제공하였던 원조의 중요성과 새로운 국제경제관계에서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논문으로는 리재숙(1957), 문정택(1957a & 1957b), 김익근(1957) 참조. 절약과 예비의 중요성을 논한 논문으로는 김일성(1956), 리종욱(1957), 「경제건설」 1957년 7월호 중 "1958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자." 황도연(1957), 김한호(1957), 황경덕(1958) 참조. 아울러 북

중공업우선성장정책에 따라 자원의 배분이 중공업으로 편중되고 농업의 협동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북한의 농업은 생산성이 저하되기 시작하고 인민의 생활은 생필품 부족을 겪기 시작한다.⁶⁸⁾ 더욱이 북한은 중공업우선성장정책의 결과로 부문간의 불균형이라는 현상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제1차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을 경제구조의 조정을 위한 완충기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 계획기간 중에 경제부문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완충기를 설정하였다는 사실은 북한 경제발전이론에서 강조되던 균형성이 실질적으로는 경제부문간의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⁶⁹⁾ 사실 이 시기부터 북한의 중공업중심의 공업화정책은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공업화의 두 축 : 군중노선과 경제·국방건설병진정책

북한이 추진하던 중공업중심의 공업화는 1950년대 말에 이르러 경제 내부의 불균형과 물적 자원의 고갈로 점차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경제관리제도의 변화를 통해 새

한은 절약과 예비를 위한 독립채산제를 이 시기부터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리기홍(1957) 참조.

6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기관지인 「인민」은 농촌협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던 1956년 9월 “3개년 계획 수행에서 달성된 성과들은 제1차 5개년 계획 수행의 물질적 담보”라는 논문에서 농촌협동화의 문제를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이 아직 충분한 량의 선진 농업 기계들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우선 생산 관계의 면에서 앞서 나가며 협동조합들의 기술적 개선의 과업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의 자각성의 제고, 특히 전시에 있어서의 공동 노력의 경험 축적 등은 기술적 개선의 조건이 일부 불충분하더라도 현실이 보여 주듯이 급속한 템포로 농촌의 협동 조합화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인민」, 1956년 9월호, p.114. 김일성은 1958년 6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이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문제를 논하고 있다. 김일성(1958) 참조.

69) 이는 북한의 경제발전이론이 기초하고 있던 맑스의 재생산도식이 불균형발전의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없음을 동시에 보여준다.

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였다. 경제관리의 혁명적 균중노선이라고 규정되는 1960년대에 새로이 나타난 북한의 경제관리체도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현지도도를 통하여 대중의 노력동원을 최대화하는 것이다.⁷⁰⁾ 당지도 강화와 대중동원으로 요약되는 균중노선은 농업에서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라는 명칭으로, 공업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⁷¹⁾ 특히 김일성은 1964년 2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함으로써 군단위의 농촌경제체도를 확립하기에 이른다.⁷²⁾ 그러나 이러한 관리방법은 결코 자신들의 경제발전이론에서 제시된 경제의 집약적 발전을 위한 생산방법·노동조직·경영활동의 합리화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관리방법은 자원(여기에서는 주로 노동력)의 철저한 양적 동원에 기초한 성장방법이었다.

한편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북한은 1950년대 말에 나타났던 자원배분의 불균형과 인민생활조건 악화를 고려하여 1961년부터 시작되는 「제1차 7개년계획(1961~67)」에서 중공업 편향의 자원배분을 일정 정도 수정하고 경공업을 주로 담당하는 지방공업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인다.⁷³⁾ 그러나 북한은 1962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채택하고,⁷⁴⁾ 최초의 정책기조를 수정한다. 더욱이 중공업부문 중에서도 국

70) 현지도도를 통하여 균중노선이 등장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유호열(1994) 참조.

71)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에 대한 간단한 정리는 사회과학출판사(1985) 참조.

72) 김일성(1964) 참조.

73) 이는 김일성(1961), pp.79~80에서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趙鳳彬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961년부터는 제1차7개년계획이 개시되는데 그 기본임무는 ‘승리한 사회주의체도에 의거하여 전면적인 기술개조와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으로 보아 계획의 原豫定은 생산기초를 계속 강화하면서 인민생활 향상에 더욱 힘을 둔 것 같다.” 趙鳳彬(1992), p.16.

74) “전원 회의는 인민 경제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국방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1963), p.159. 경제자립, 국방자위로 요약되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북한이 1962년 12월 채택하게 된 배경으로는 중·소이념분쟁으로 인한 국방자위의 필요성, 쿠바위기로 격발된 세계

방부문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자원배분구조는 중공업우선성장정책 시기보다 더욱 왜곡되기 시작하며, 특히 국가의 재정에서 국방비의 비중은 1964년부터 절대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⁷⁵⁾ 그 결과 자연히 북한이 「제1차 7개년계획」 기간동안 달성하려고 했던 인민경제의 균형발전과 인민생활의 획기적 향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북한은 계획기간 자체를 3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하였다.

3. 개방정책의 도입과 경제정책의 동요, 1971~1990

경제의 침체와 경제계획의 실패는 북한 지도부가 새로운 경제정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더욱이 1960년대 이루어진 남한 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북한과 남한간의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고, 1970년대 초반부터는 남한이 실질적인 경제력에서 북한을 앞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북한 지도부가 경제성장에 있어 선진기술과 대외경제관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1970년대 초부터 경제정책의 핵심 방향을 기술혁명에 두고 있으며,⁷⁶⁾ 대외무역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⁷⁷⁾ 그러나 북한 지도부의 정책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정책의 시행은 국제경제질서의 동요로 인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북한 경제를 다시 폐쇄적인 자립경제로 돌아가게 한다. 그 후 북한은 1980년대 중반 다시 개방정책을 추진하지만, 그 역시 성공하지 못한다.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대응

적 차원의 냉전적화, 남한내 군사정권의 수립 등을 들 수 있다.

75) 통일원(1996), p.141.

76) 물론 북한은 초기부터 기술을 통한 생산력 향상을 강조하였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김일성은 1961년에도 '기술혁명, 전면적 기술개건, 문화혁명' 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김일성(1961), pp.125~128.

77) "우리는 앞으로 얼마동안 자본주의시장에 널리 진출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사와야 하겠습니까. ... 경공업공업을 꾸리는데 필요한 설비들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사와야 합니다." 김일성(1972), p.487.

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추진하면서 일종의 농성경제체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 시기는 북한 경제의 모순이 개방과 체제고수라는 두 정책노선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제정책의 동요와 함께 점점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던 시기이다.

1차 경제개방정책과 새로운 사회동원정책

북한이 1971년부터 시작한 「6개년계획」은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의 견고화, 공업설비의 근대화, 기술혁명의 추진을 계획 기간동안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설정해 두고 있다. 이러한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1970년부터 선진자본주의국가로부터 소규모의 차관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1972년부터는 상당 규모의 차관을 통해 자본설비와 기술을 선진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⁷⁸⁾ 그리고 북한은 도입한 자본설비를 사용하여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에 나섰다.⁷⁹⁾ 이 시기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볼 때, 이를 북한 경제의 1차 개방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70년대 중반 세계적 경기침체 때문에 수출정책에서 실패를 하게 되고, 그 결과 1976년부터 차관을 도입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 때부터 북한은 다시 폐쇄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한편 이 시기동안 북한은 외자도입정책과 병행하여 사회동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다. 이것이 바로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 추진 전략이다.⁸⁰⁾ 기술혁명의 추진을 당중앙이 직접 지도하기 위하여 추진된 3대 혁명추진전략의 구체적인 방법은 1973년부터 시작된 '3대 혁명소조 운동', 1975년부터 시작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었다.⁸¹⁾ 북한의

78) 선진자본주의국가로부터 도입한 차관의 규모는 아래 <표 2> 참조.

79) 대외무역의 성과에 대해서는 아래 <표 3> 참조.

80) 김일성(1972) 참조.

81) 이에 대해서는 김일성(1973)과 김일성(1975) 참조.

이러한 노력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도입을 통해 경제발전의 집약화를 추구하려는 기본 방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있었던 경제정책은 대중에 대한 사상·이념교육을 기초로 사회 전체의 노동력을 좀더 집중적으로 동원하는 방안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북한은 경제관리체계의 변화를 위해 1973년 연합기업소 제도를 도입한다.⁸²⁾ 연합기업소 체계는 산업화에 따라 대규모 생산체계가 필요한 상태에서 복잡해진 생산단위들간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공업관리를 합리화하려는 방안으로 이해될 수 있는 연합기업소 체계는 1985년 7월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다.⁸³⁾

주체경제와 현대화

사상·기술·문화 혁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은 「6개년계획」이 끝난 다음해인 1977년에는 새로이 완충기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8년부터 시작된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에서 북한은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라는 정책기조를 제시한다.⁸⁴⁾ 김일성의 정의에 따르면, 주체화는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나라의 기술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을, 현대화는 “뒤떨어진 기술을 선진 기술로 개조하여 인민경제의 기술 장비 수준을 높인다는 것”을, 과학화는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모든 부문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 위에 올려 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⁸⁵⁾ 여기에서 현대화와 과학화라는 정책기조는

82) 연합기업소와 관련해서는 최진성(1974) 참조.

83) 박영근 외(1992), pp.101~148; 고승효(1993), 5장 2절; 이태욱(1992) 참조.

84) “제2차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여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 것이다.” 김일성(1977), p.547.

85) 김일성(1980) 참조.

1970년대 초부터 북한이 추구하던 '생산의 집약적 발전을 위한 기술혁명'을 좀더 분명한 정책기조로 정식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조는 '인민경제의 주체화'라는 폐쇄적 정책기조에 억눌려 적절한 실현수단을 찾지 못한다. 결국 「제2차 7개년계획」의 기조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의 강화라고 판단되며, 이 시기부터 북한경제의 침체는 가속화되기 시작한다.⁸⁶⁾

2차 경제개방정책과 우리식 사회주의

북한은 「제2차 7개년계획」이 실패로 끝나가는 1984년 초부터 제3세계 국가들, 자본주의 국가들과 대외경제관계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침체를 극복하려는 정책의지를 표명한다.⁸⁷⁾ 이에 따라 북한은 1984년 9월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영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⁸⁸⁾ 그러나 「합영법」은 합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북한의 투자환경은 북한의 대외신용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해외자본을 끌어들이 충분한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였다.⁸⁹⁾ 그 결과 합영회사는 재일조선인 기업가들의 투자로 한정되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투자 자체도 북한 당국의 자의적 회사운영으로 성공적이지 못하였다.⁹⁰⁾

두 번에 걸친 경제개방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1980년대 중반의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개혁과 잇따른 붕괴는 북한의 지도부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대응하기

86) 아래 4장 1절 참조.

87) 김일성(1984a)와 김일성(1984b) 참조.

88) 「합영법」은 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10호로, 「합영법 시행세칙」은 1985년 3월 20일 정무원 결정 14호로 발표되었다.

89) 더욱이 중국과 베트남의 개방으로 인하여 사회주의권 국가들 중에서도 북한은 입지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90) 신지호(1996) 참조.

위하여 북한은 그동안 추진되던 소극적이고 제한적이었던 개방정책이나 1986년부터 중지하였다. 북한은 1986년 말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건설노선을 다시 자신들의 경제정책기조로 선택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강조하는 북한의 정책기조는 1989년에 이르러서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라는 극단적인 자기폐쇄적 이념으로 정착되고, 북한은 이후 2년여 동안 위기에 빠진 체제를 지키기 위한 체제보존정책을 사회 전 분야에서 고수한다.⁹¹⁾ 그리고 이 시기부터 북한은 체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가는 심각한 경제침체로 접어들게 된다.

한편 이러한 폐쇄정책의 이면에서도 북한 지도부는 대외무역의 중요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북한은 1987년부터 시작된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의 주요 목표의 하나로 무역·대외경제사업의 확대를 설정해 두고 있다.⁹²⁾ 북한은 외국자본의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합영공업부를 1988년 말 신설하고, 무역부 산하 단체로 국제무역촉진위원회를, 대외경제사업부 산하단체로 조선대외과학기술교류협회를 설립한다.⁹³⁾ 또한 북한은 부분적으로 자본주의국가와 합영·합작도 추진할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한다.⁹⁴⁾ 또한 1988년부터 북한과 중국 간에는 변경무역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⁹⁵⁾

한편으로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경제관계의 발전을 강조하는 이 시기 북한의 경제정책기조는 북한 지도부가 정책선택에서 얼마나 혼란상태에 빠져 있었던가 하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 시기 주체경제의 기본노선내에서 대외경제개방과 관련한 정책동요를 거치면서 북한은 1990년대 초반에 새로이 경제개방으로 나아

91) 김일성(1986), 김일성(1987), 김정일(1989) 참조.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응에 대해서는 김병로(1993)와 고유환(1995) 참조.

92) 「제3차 7개년계획」에서 제시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조선중앙통신사(1988) 제6장 참조.

93) 오병훈(1994), pp.101~114.

94) 김일성(1988), 정송남(1988), 김달현(1989a), 김달현(1989b) 참조.

95) 연하청·노용환(1994) 참조.

갈 정책방향을 암중모색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⁹⁶⁾

4. 경제위기와 지역개방정책, 1991~현재

동구사회주의권 붕괴의 여파가 진정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시 경제개방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에 직면한다. 특히 대외경제관계에서 북한이 의존하고 있던 소련과 중국이 북한과 맺고 있던 상호호혜적 경제관계를 단절하고 국가이익에 기초한 경제관계를 설정하려고 함에 따라, 북한은 경제운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에서 심각한 부족을 겪게 되는 동시에 외화획득에서도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해 갈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북한의 지도부는 1991년부터 대외경제개방에 대하여 일정한 태도변화를 보여왔다.⁹⁷⁾ 아울러 경제개방에 대한 중국의 정책권고와 개방정책이 중국에 가져다 준 성과는 북한이 중국식의 지역개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1980년대 말부터 UNDP가 추진하고 있던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북한이 두만강지역에 속한 동북부 지역을 개방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이 지역의 개발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0년 중반부터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됨에 따라, 북한은 지역개방이 가져올 수도 있는 체제위협에 대해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었다.

마침내 북한 지도부는 1991년 12월 정무원 결정을 통해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이 지역을 자신들의 대외개방기지로 삼기로 결정하였다.⁹⁸⁾ 동북부 지역을 경제특구로 설정한 후, 북한은

96) 이 시기 정책선택과 관련하여 북한 지도부 내부에서 나타난 혼란에 대해서는 오병훈(1994), 4장 2~5절 & 5장 1절 참조.

97) 오병훈(1994), p.139.

98)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1995) 참조.

자신들의 대외경제관계 관련 기구들을 기구통합과 분권화라는 원칙에 맞추어, 국가무역체제와 지방무역체제로 재편한다. 소위 '신무역체제'로 불리는 기구정비를 통해 북한은 경제특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대외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내적 개혁을 시작한 것이다.⁹⁹⁾

북한의 경제정책변화는 「제3차 7개년계획」이 끝나는 1993년 말 확연하게 드러난다.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1993.12.8)에서 경제계획의 실패를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완충기로 설정된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농업제일주의·경공업제일주의·무역제일주의로 정하였다.¹⁰⁰⁾

북한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핵문제로 야기된 한반도내 긴장 고조, 김일성의 사망, 1995년 이후 잇따른 자연재해는 북한의 경제를 완전한 위기국면으로 몰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는 적극적인 지역개방에 앞서서 북한 내부의 정세안정에 모든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북한은 체제동요를 우려하여 개방범위를 제한하고 내부 개혁을 억제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아직까지 지역개방을 통한 경제회복의 효과를 그다지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¹⁰¹⁾

99) 정무원 기관지 「민주조선」은 1992년 2월 26일자에 “대외무역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정무원 결정 채택”이란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리신효는 「경제연구」 1992년 제4호에 “새로운 무역체제의 본질적 특성과 그 우월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리신효는 논문(p.30)에서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하고 있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자면 위원회, 부들과 도들에서 무역활동을 직접 하게 하는 한편 대외시장을 끊임없이 넓혀나가야 합니다.” 오병훈은 북한이 1991년 말 취하게 된 대외개방정책을 오랜 정책혼란 끝에 나타난 정책레짐의 변화로 규정한다. 오병훈(1994), 5장 3절 참조.

100) 박순성(1994b), 2장 2절 참조.

101) 이런 점에서 1991년 이후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정책레짐의 변화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1990년대는 북한의 자립형 사회주의경제체제가 대외개방으로 가는 주요한 변화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IV.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성공과 실패

자립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민족경제를 빠른 속도로 건설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려는 경제발전이론, 자력갱생노선에 바탕을 두고 인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달성하려는 경제정책, 양자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해 온 세계경제속에서 북한 경제가 현재 어디에 도달해 있을 것인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더욱이 반복된 경제발전계획의 연장 혹은 완충기의 설정, 1993년도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 최근 알려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¹⁰²⁾와 전반적인 가동률 저하, 나진-선봉지대를 통해 드러나는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열악한 상태는 북한 경제의 현실이 북한의 경제발전이론이나 경제정책에서 제시되는 이상상태나 목표와는 엄청난 괴리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본 장에서는 북한의 경제현실을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경제총량지표를 통해 경제발전의 중장기적 추세를 살펴본다. 둘째, 1990년대 북한 경제의 위기와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제변화의 움직임을 확인해 본다.

1. 경제총량지표와 중장기 추세

북한 경제발전의 전반적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북한 경제총량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1953년부터 1984년까지 북한의 사회총생산액, 국민소득, 재정, 투자액, 공업총생산

102)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1998)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불교운동본부의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에서 정기적인 식량배급이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끊어지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1998), p.16.

성, 원조와 차관, 무역 등의 지표를 검토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증장기 추세를 파악하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통계가 매우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신뢰도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총량지표에 기초하여 경제변화를 살펴보려는 것은 상당한 한계를 지닌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될 수 있으면 북한이 발표한 통계수치들간의 상호일관성을 검토함으로써 믿을 만한 경향을 추출해 보려고 노력하였다.¹⁰³⁾
(표는 다음 페이지에 붙음)

103) 북한의 통계는 통일원이 1996년에 발간한 「북한 경제 통계집」과 민족통일연구원이 1995년 '원내 참조용'으로 발간한 「남북한 경제지표 편람」을 활용하였다. 두 통계자료집은 북한의 원전에 나온 통계자료들을 거의 빠짐없이 수집·정리하였다는 점에서 방대한 북한 원전을 모두 조사할 수 없는 연구자들에게 주요한 연구자료가 된다.

<표 1> 북한 경제총량지표 I

계획	연도	사회총생산의 평균성장률	사회총생산의 질년비성장률	사회총생산의 성장률	국민소득 성장률			
휴전	1953							
전후복구 3개년 계획	1954	28.1		29.5	28.1	26.5	30	20.0
	1955							
	1956							
5개년 계획	1957	23.7		27.4	20.4	37	15.8	20.0
	1958							
	1959							
	1960							
제1차 7개년 계획	1961	13.2	18.0	18.3	9.9	15.2	(3.2/4.9) ¹	10.4
	1962	11.1	6.2	10.6			10	
	1963	9.4	10.0	5.5			10/6.8	
	1964	10.0	9.0	8.7			10	
	1965	3.7					7	
	1966							
	1967							
계획 연장기	1968				16			7.6
	1969							
	1970							
6개년 계획	1971				14.2	14.2	10.3	7.6
	1972							
	1973							
	1974							
	1975							
	1976							
완충기	1977							
제2차 7개년 계획	1978				8.8			7.6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1.6 ²		

- 사회총생산액 평균성장률은 통일원(1996), p.119, “제4장 국민소득, 1. 사회총생산, 가. 연도별 사회총생산액”에서 도출
- 사회총생산액 전년비성장률은 통일원(1996), p.119, “제4장 국민소득, 1. 사회총생산, 나. 사회총생산액의 성장률”을 사용
- 사회총생산액 성장률은 통일원(1996), p.122, “제4장 국민소득, 1. 사회총생산, 다. 계획기별 사회총생산액과 기본건설투자액”에서 도출
- 국민소득 성장률은 통일원(1996), p.127, “제4장 국민소득, 2. 국민소득, 나. 국민소득의 성장”과 민족통일연구원(1995), p.39 “<부표 III-2> 북한의 국민소득성장에 관한 공식발표 및 언급자료”에서 제시된 수치로부터 도출
- 주1 : 좌측 두 열에서 나온 1960년 국민소득을 고려하여 계산한 1961년도 연성장률임
- 주2 : 1946년 대비 65배를 연평균성장률로 계산했을 때임

<표 2> 북한 경제총량지표 II

계획	연도	세입증 가율	원조 (북한단위)	국가기본건설 총투자액(상장률)	공업총생산 상장률	계획기원공업 총생산액(상장률)	차관(만달러) 공산권 OECD국	
휴전	1953	15.8	9,755		21.3			
전후복구 3개년 계획	1954	71.0	28,317	3.9	50.9	41.7		
	1955	20.0	23,362		48.8			
	1956	-16.6	16,384		26.8			
5개년 계획	1957	38.0	15,322	9.2	44.7	36.6		
	1958	22.0	6,422					
	1959	12.2	8,407		11.4		55.7	
	1960	77.7	4,039		-8.5		10.5	
제1차 7개년 계획	1961	18.9		4.4	14.3	12.8		
	1962	20.7		10.2	20.8			
	1963	8.6		4.9	10.3			
	1964	11.3		9.9	15.6			
	1965	2.1			14.1			
	1966	2.7			-2.8			
	1967	11.9			17.0			
계획 연장기	1968	22.3			15.0			
	1969	5.9			-1.3			
	1970	17.2			31.4		8,700 300	
6개년 계획	1971	2.0				18.4 & 16.3 ¹	25,000 1,700	
	1972	16.9			18.8		15,000 20,400	
	1973	15.7			19.0		10,900 37,500	
	1974	16.3			17.2		12,000 40,000	
	1975	15.8			25.0		18,600 24,300	
	1976	9.0			5.0		560	
완충기	1977	9.2						
제2차 7개년 계획	1978	13.6	25,870 (만달러)		17.0	12.2	29,615	
	1979	11.6			15.0			
	1980	9.5			18.0			
	1981	8.1						
	1982	9.6			16.8			
	1983	7.5						
	1984	7.9						

- 세입증가율은 통일원(1996), p.131, “제5장 재정·금융, 1. 예산, 가. 예산수입, 연도별 세입총액 및 증가율”을 사용
- 국가기본건설 총투자액성장률은 통일원(1996), p.144, “제5장 재정·금융, 2. 국가기본건설투자, 가. 투자액 추이, 국가기본건설 투자액의 성장” 사용
- 공업총생산성장률은 통일원(1996), p.319, “제7장 공업·광업, 1. 공업총생산, 나. 공업총생산의 성장률” 사용
- 계획기별공업총생산액성장률은 통일원(1996), p.321, “제7장 공업·광업, 1. 공업총생산, 나. 공업총생산의 성장률, 계획기별 공업총생산액의 목표와 실적” 사용
- 원조와 차관은 민족통일연구원(1995), p.53, “<부표 IV-3> 북한의 항목별 세입예산액”과 p.180, “<부표 X-10> 북한의 원조 및 차관도입 현황”을 사용
- 주1 : 1975년에 대해서는 25%라는 별도의 수치가 추가로 존재

<표 3> 북한 총량경제지표 III

계 획	연 도	총무역액 (억달러)	무역의존도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
제1차 7개년 계획	1961				
	1962				
	1963				
	1964				
	1965	3.9	20.5	10.0	10.5
	1966				
	1967				
계획 연장기	1968				
	1969				
	1970	8.1	25.3	11.6	13.7
6개년 계획	1971	9.1	26.0	11.7	14.3
	1972	10.4	24.8	9.5	15.3
	1973	13.4	25.8	9.6	16.2
	1974	19.8	33.6	11.5	22.1
	1975	19.1	29.4	12.6	16.8
	1976	15.3	19.9	9.5	10.4
완충기	1977	15.2	17.7	7.9	9.8
제2차 7개년 계획	1978	20.8	19.8	9.7	10.1
	1979	27.9	22.5	11.0	11.5
	1980	34.2	25.3	11.6	13.7
	1981	28.3	20.9	8.9	12.0
	1982	32.3	23.8	11.3	12.5
	1983	28.3	19.6	9.1	10.5
	1984	27.3	18.5	9.1	9.4

○ 총무역액 및 무역의존도는 민족통일연구원(1995), p.161, “<표 X-1> 무역총액” & p.167, “<표 X-5> 무역의존도”를 사용

위에 제시된 통계수치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실은 195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1960년대부터 나타나고 있는 경제성장률¹⁰⁴의 하락 추세이다. 경제성장률은 1960년대 초부터 20%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면 1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위의 통계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경제계획 시기별로 주목할 만한 점들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① 1956년 : 북한 내부에서 경제성장정책과 관련하여 주요한 논쟁이 일어났던 1956년은 세입증가율에서 감소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원조의 감소와 결합되어 있으며, 또한 이전 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공업총생산성장률의 감소와 결합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1956년은 전후 북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최초의 성장률 둔화가 나타난 해로 해석될 수 있다.

② 1957~1960년 : 1960년은 경제성장률이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급속히 하락한 해이다. 성장률과 관련한 거의 모든 수치들이 10% 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국가기본건설 총투자액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북한은 「전후복구 3개년계획」의 조기 달성을 주장하였지만, 1960년을 완충기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 경제성장률의 저하는 사회주의권의 원조 감소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

③ 1960년대 : 이 시기는 10%대의 경제성장률을 비교적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962~1964년간은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저하되었다. 이는 1962년의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생산의 저하, 1963년과 1964년의 투자액의 감소에 원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60년대에 걸쳐 원조는 대부분 차관으로 바뀌었으며, 충분한 공업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66년과 1969년의 세입증가율의 하락, 공업총생산 성장률의 하락(마이너스성장)은 북한의 중공업중심 성장정책에도 불구하고 공업분야의 정체가 1960년대 중반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

104) 여기에서 경제성장률은 사회총생산액 성장률, 국민소득 성장률 등과 같은 경제성장 관련 총량지표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는 경제성장의 일반적 경향을 의미한다.

작했음을 보여준다.

④ 1971~1977년 : 이 기간동안 「6개년계획」이 추진되었으며, 그 후 1년의 완충기가 설정되었다. 1972년부터 1975년은 경제성장률이 비교적 양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사실은 차관의 도입이 OECD국가로부터도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아울러 무역이 증가하였으며, 무역의존도도 상당히 상승하였다. 북한의 1차 경제개방이 가져온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공업총생산 성장률도 비교적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다. 무역의존도 중에서 수입의존도가 수출의존도보다 높았다는 사실은 이 기간동안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상당히 이루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1976년부터 무역의 감소, 무역의존도의 감소, 세입증가율과 공업총생산 성장률의 저하가 확인된다.

⑤ 1978~1984년 : 「제2차 7개년계획」이 추진되었던 이 기간동안 경제성장률은 10% 이하로 떨어졌다. 만일 1967년의 국민소득(전쟁전, 즉 49년의 9배; 49년은 46년의 2.09배이므로 67년은 46년 대비 18.81배임)과 1984년의 국민소득(46년의 65배)을 비교한다면, 17년간 성장률은 7.6%이다.¹⁰⁵⁾ 따라서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중반의 경제성장률이 실제적으로 10%를 넘었다면, 이 기간동안 북한의 경제는 연평균 3~4% 수준으로 성장하였거나 최악의 경우 거의 성장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 시기 OECD국가의 차관은 완전히 단절되었으며, 공산권으로부터 들어온 차관의 총액도 절대적으로 감소하였다.¹⁰⁶⁾

지금까지 북한이 발표한 경제총량지표를 기초로 북한의 195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경제성장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경제는 이미 1960년대부터 경제성장에서, 그리고 심지어 중공업부문에서조차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였다. 한편 북한 경제

105) 1946년 대비 1967년과 1984년의 국민소득 비율은 민족통일연구원(1995), p.39 참조.

106) 이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무상원조가 이루어졌으나, 금액 자체는 충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는 1970년대 중반 개방정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다시 침체에 빠졌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경제가 1980년대 후반부터 심각한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2. 경제위기와 체제변화

북한 경제가 1980년대 후반부터 실질적으로 부딪혔던 난관은 1990년대부터 경제총량지표의 전반적 악화로 현실화되어 나타난다. <표 4>에서 보듯이, 1990년부터 국민총생산, 국내총생산, 각 산업분야, 무역 등 전 총량지표에서 감소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¹⁰⁷⁾ 더욱이 1995년부터 3년에 걸쳐 지속된 자연재해는 북한의 농업을 완전히 붕괴시켰으며,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나타난 사회주의경제권의 마비는 북한의 에너지난을 심화시켜 경제 전반의 가동률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다.¹⁰⁸⁾ 흔히 이러한 북한 경제의 위기상황을 경제적 악순환 구조로 설명하기도 한다.¹⁰⁹⁾ 사실 이러한 북한의 경제위기는 내부 경제체제의 구조적 한계와 지속된 경제침체로 인하여 북한 경제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변화된 외부 경제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

107) 각 산업별 성장률 추이에서 주목할 사항은 광공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의 지속적 생산저하이다. 그 결과 광공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도에 이미 38.7%로 떨어졌다. 이 수준은 북한이 공업화를 추진하던 1960년대 초반의 수준이다. 한편 서비스부문의 비중은 1994년 이후부터 1996년까지 27.9%, 30.3%, 32.3%로 증가하였다. 이는 광공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분야의 가동률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행(1997), 「1996년 북한 GDP 추정결과」, 참조.

108)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북한 자신이 이미 1993년 말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북한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은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 정치경제체제 자체의 문제점에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북한 경제난에 대한 조망으로는 민족통일연구원(1997) 참조.

109) 한국산업은행(1994) 참조.

에 발생하였다.

<표 4> 1990년대 북한의 주요 경제총량지표

(단위 : %, 억달러)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GDP성장률	△3.7	△5.1	△7.7	△4.2	△1.8	△4.6	△3.7
농림어업	△10.2	28	△2.7	△7.6	27	△10.5	1.0
광업	△8.5	△6.8	△6.1	△7.2	△5.5	△2.3	△11.8
제조업	△1.5	△13.4	△17.8	△1.9	△3.8	△5.3	△8.9
전기·수도	△2.2	△4.5	△5.7	△8.7	4.2	0.1	△7.8
건설업	5.9	△3.4	△2.1	△9.7	△26.9	△3.2	△11.8
서비스	0.3	2.5	0.8	1.2	2.2	1.5	0.8
교역규모	47.2	27.2	26.6	26.4	21.1	20.5	19.8
수출	19.6	10.1	10.2	10.2	8.4	7.4	7.3
수입	27.6	17.1	16.4	16.2	12.7	13.1	12.5
GNP성장률	△3.7	△5.2	△7.6	△4.3	△1.7	△4.5	△3.7

* 자료 :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보도자료, 각 연도), (1994, 1995, 1996, 1997)

이미 수 년 넘게 지속된 현재의 북한 경제위기는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북한 사회경제체제의 변화는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¹¹⁰⁾ 하나는 사회주의체제의 이완현상이며, 다른 하나는 체제의 개방이다.

북한은 1950년대 중반 인민경제 전체를 사회주의화하였다.¹¹¹⁾ 특히 1960년대 들어서는 북한의 정치·사회·경제체제 전체가 유일체제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는 서서히 이완되어 가고 있다. 체제이완은 크게 세 부분으로 파악된다. 첫째는

110) 이 부분은 박순성(1996), pp.463~469 참조.

111) 북한 경제의 사회주의화에 대한 지표는 통일원(1996), p.125, “제4장 국민소득, 1. 사회총생산, 마. 사회총생산액의 소유형태별 구성” 참조.

북한의 유일체제를 지탱하는 관료집단의 일탈행위 증대이다. 주로 개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어나는 관료집단의 일탈행위는 당과 국가의 권위를 마모시키면서, 인민에 대한 통제와 정당화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¹¹²⁾ 둘째는 식량과 생필품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주민들의 비사회주의적인 경제행위이다. 주민들은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탈하거나 상업행위를 벌이며,¹¹³⁾ 주민들에게 최저생존조건조차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북한 지도부는 현재 주민들의 일탈행위를 묵인함으로써 점차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¹¹⁴⁾ 셋째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북한 지도부가 도입하고 있는 물질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경제관리제도의 도입이나 주민들 상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제2경제의 목인이다. 협동농장에서는 가족단위의 분조관리제가 도입되고, 인민들 사이에서는 텃밭·부업밭이나 불법의 퇴기밭이 경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경제체제를 벗어나는 제2경제가 점점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¹¹⁵⁾

한편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방정책은 북한의 경제체제를 완전히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미 나진-선봉지대에서는 사영상업이 허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주의체제를 벗어나는 경제활동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자유경제무역지대내 합영기업이나 외국인기업, 그리고 일부 지역의 합영기업에서 형성될 자본주의적 임노동관계는 기존의 북한 노동관계를 완전히 변질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개방과 함께 개방

112) 김성철·이기동(1994) 참조.

113)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행동들은 나무·산나물·옷·약초 등의 장사, 집·가구·집기 팔아치우기, 푸대족·벼뿌리·소나무껍질 먹기, 친지의 도움 요청, 도둑질, 돼기밭 경작, 구걸, 식량 발견을 위한 다른 지역 이동, 각종 일일노동 등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1998), p.17.

114) 김연철(1997) 참조.

115) 최수영(1997) 참조.

경제영역과 사회주의경제영역간의 경제적 격차는 북한 주민 내부에 심각한 분열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결국 북한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체제이완과 체제개방은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서서히 잠식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체제를 다른 체제로 이행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북한 경제체제가 어떠한 경제체제로 이행해 갈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게 제시할 수 없다. 북한 경제체제의 앞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능성이 놓여 있다. 심지어 우리는 북한 경제체제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급속한 체제붕괴를 거치면서 남한의 경제체제에 완전히 흡수되는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V. 이론과 현실의 괴리, 동요하는 경제정책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은 경제발전과 관련하여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가 이상적으로 발전하면서 민족경제의 자립을 달성할 수 있는 원리로서 사회주의계획경제론, 불균형성장론, 집약적 발전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북한의 경제정책에서 중공업우선성장정책, 선행경제부문우선성장정책, 경제건설·국방건설병진정책,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등으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현실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이 목표로 하는 낙관적인 경제발전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침체와 주민의 생활고를 보여 주고 있다. 더욱이 북한 경제가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심각한 침체현상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이론과 경제정책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경제체제의 개방이나 개혁과 같은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 경제이론은 더욱더 비현실적인 경제발전이론을 제시할 뿐이며, 경제정책은 폐쇄경제와 개방경제 사이를 오가면서 끊임없이 동요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북한 지도부가 선택한 지역개방정책도 북한의 전반적 체제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직된 주체사상에 기초한 비현실적인 경제발전이론과 위기에 빠진 경제현실은 북한 경제에서 이론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괴리를 보여준다. 그런데 북한의 현 상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이론과 경제현실은 단순히 일치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점점 더 멀어지고 분산하고 있다. 경제현실을 설명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안원리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제이론은 폐쇄적인 정치체제와 이념체제 아래에서 주민들에게 경제현실을 은폐하거나 주민들을 이념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비현실적인 지배담론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론에 따라 분석되거나 통제되지 못하는 경제현실은 더욱더 악화되면서 체제 자체의 붕괴로까지 나아갈 조짐을 보인다. 북한의 경제이론과 경제현실은 일종의 바로되먹임작용을 통한 파국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좀더 강조해서 말한다면, 경제이론과 경제현실간에는 당위와 현실간의 괴리가 아니라 정당화작업과 모순적 현실간의 악순환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1990년 초 지역개방을 경제정책의 근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북한의 경제정책전환은 경제정책과 관련한 근본 방향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개방정책은 체제붕괴를 가져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지역개방조차 제한적으로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개방정책에 걸맞은 제도적 장치와 입지경쟁에 유리한 경제적 하부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정책은 만족할 만한, 따라서 개방정책 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 자연히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경제정책이 일정 정도의 방향전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동요하도록 한다. 사실 앞에서 살펴본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197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이 꾸준

히 바뀌어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일정하지 않았으며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경제이론과 경제현실 사이에 나타나는 괴리와 동요하는 경제정책은 위기에 처한 북한의 경제현실이 쉽사리 회복의 과정으로 들어설 수 없으리라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리게 한다. 아니, 북한의 유일체제가 지닌 자기기만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전망은 심지어 비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부분적이지만 주기적인 체제개방 시도는 경제위기의 심화와 환경변화에 따라 북한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으로 귀결되었다. 추측컨대 이러한 변화는 점차적으로 북한의 경제이론과 지배이념에까지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이미 북한 주민들의 의식속에서, 그리고 부분적이지만 북한의 경제이론에서 미세한 형태로나마 나타나고 있다.¹¹⁶⁾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이론과 경제현실이 접근할 때, 그리고 경제정책이 개방의 방향으로 어느 정도 일관되게 나아갈 때, 우리는 북한 경제체제의 붕괴에 대한 극단적 전망을 잠정적으로나마 유보해 둘 수도 있을 것이다.

116)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에 대해서는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1998), 북한 경제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는 박순성(1997), 3장 참조.

참 고 문 헌

- 「경제건설」, 1957년 7월호.
- 고승효 지음, 양재성 옮김(1993), 「북한 경제의 이해」, 서울: 평민사.
- 고유환(1995), “사회주의의 위기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평화문제 연구소, 「통일문제연구」 7권 1호.
- 김달현(1989a),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근로자」 1989년 2월호.
- 김달현(1989b),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키자,” 「근로자」 1989년 9월호.
- 김병로(1993), 「김정일저작 해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김상학(1956),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당과 정부의 경제 정책,” 「인민」 1956년 7월호.
- 김성철·이기동(1994), “북한 관료일탈행위의 동태적 분석: 국가권위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3권 1호.
- 김수행(1988), 「정치경제학원론」, 서울: 한길사.
- 김연철(1996),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70):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원」,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연철(1997),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 김원삼·한득보(1987), 「사회주의정치경제학연구에서의 몇가지 리론문제」,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익근(1957), “외화 획득 및 외화 절약의 가일층의 강화를 위하여,” 「경제건설」 1957년 10월호.
- 김일성(1945), “북조선공산당 각급 당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 :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한 보고 1945년 12월 17일,” 「김일성 저작집」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46), “20개조 정강, 방송연설 1946년 3월 23일,” 「김일성 저작집」 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56),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더 많은 강재를 생산하

자, 강선제강소 지도일군 및 모범로동자들의 협의회에서 한 연설 1956년 12월 28일, 「김일성 저작집」 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1958),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며 상품유통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8년 6월 7일, 「김일성 저작집」 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1961),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61년 9월 11일, 「김일성 저작선집」 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1964),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채택 1964년 2월 25일,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1965),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하여, 국가계획위원회당총회에서 한 연설 1965년 9월 23일, 「김일성 저작집」 1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197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72년 10월 23~26일, 「김일성 저작집」 2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1973), “경공업부문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경공업월간》에 경공업공장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동원되었던 대학 교원 학생들의 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3년 1월 31일, 「김일성 저작집」 2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1975),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공업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 1975년 3월 3일, 「김일성 저작집」 3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197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2차7개년(1978~1984)계획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1977년 12월 17일, 「김일성 저작집」 3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1980),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 1980년 10월 10일,” 「김일성 저작집」 3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84a),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결정 1984년 1월 20일,” 「김일성 저작집」 3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84b),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무역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4년 2월 13일,” 「김일성 저작집」 3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86),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1986년 12월 30일,” 「김일성 저작집」 4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87),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자, 경제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7년 1월 3일,” 「김일성 저작집」 4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1988),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기념 경축보고대회에서 한 보고 1988년 9월 8일,” 「김일성 저작집」 4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1995),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 투자, 무역, 봉사 특혜제도」, 평양.
- 김정일(1989),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1989년 12월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통일원 (1993), 「김정일 주요 논문집」.
- 김한호(1957), “건설 부문에서의 원가 저하의 예비,” 「경제건설」, 1957년 10월호.
- 리기성(1992),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I : 사회주의경제의 전반적령역에서 작용하는 경제 법칙과 범주」,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리기홍(1957), “기업소 내부 독립 재산제의 광범한 도입을 위하여,” 「경

- 제건설], 1957년 3월호.
- 리동준(1992), 「경제관리업무자동화체계」,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리신효(1992),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성과 우월성,” 「경제연구」, 1992년 4호.
- 리재숙(1957), “수출 원천 확대와 외화 획득의 증대를 위하여,” 「경제건설」, 1957년 2월호.
- 리종옥(1957), “1957년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제 과업,” 「경제건설」, 1957년 1월호.
- 칼 맑스 저, 김수행 역(1989), 「자본론」 1권 & 2권, 서울: 비봉출판사.
- 문정택(1957a), “대의 무역 계획화에 관한 몇가지 문제,” 「경제건설」, 1957년 4월호.
- 문정택(1957b),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경제 원조와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 「경제건설」, 1957년 8월호.
- 민족통일연구원(1995), 「남북한 경제지표 편람」.
- 민족통일연구원(1997),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97-06.
- 「민주조선」, 1992년 2월 26일, “대의무역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정무원 결정 채택”
- 박순성(1994a), “분단체제와 변혁운동,”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24호.
- 박순성(1994b), “김정일정권의 경제정책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3권 2호.
- 박순성(1996), “북한경제와 체제변화,”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36집 2호.
- 박순성(1997), “북한의 경제학 체계 개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동아연구」, 33집.
- 박영근·김철제·리해원·김하룡(1992), 「주체의 경제관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박종철(1994), “북·미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통일

- 연구논총」, 3권 1호.
- 사회과학출판사(1985), 「경제사전」 1권, 2권, 평양.
- 서남원(1966), 「북한의 경제정책과 생산관리 : 독재경제의 이론과 실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신지호(1996), 「『朝鮮合營事業의 교훈』」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 1996년 9월호(21호).
- 연하청·노용환(1994), 「북한-중국 변경무역에 관한 소고」,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포럼」(1994.1.26).
- 오병훈(1994),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 위기상황에서 정책변화의 역동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1998), 「북한 식량난의 실태 : 북한 식량난민 770명 면담조사 결과 보고서」.
- 이매뉴얼 윌러스타인(1992), 「1980년대의 교훈」, 「창작과 비평」, 1992년 여름(20-2).
- 유호열(1994), 「김일성 「현지도」 연구 :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3권 1호.
- 이수훈(1993), 「세계체제론」, 서울: 나남.
- 이태욱(1992), 「북한의 공업관리체계」, 「북한연구」, 3권 1호.
- 「인민」, 1956년 9월호.
- 정경모·최달곤 편(1990), 「북한법령집」 2권, 3권, 4권, 서울: 대륙연구소.
- 정승남(1988), 「합영, 합작은 다른나라들과의 경제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형태」, 「근로자」, 1988년 11월호.
- 趙鳳彬(1992), 「朝鮮經濟概論」,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제도적 분석」.
- 조선중앙통신사(1949), 「조선중앙년감 1949」.
- 조선중앙통신사(1963), 「조선중앙년감 1963」.
- 조선중앙통신사(1988), 「조선중앙년감 1988」.
- 「중앙방송」, 1993년 12월 9일, 「제3차7개년계획(1987~1993)수행정형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 (1993. 12. 9. 06:10).

- 최수영(1997), 「북한의 제2경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최중극(1990), 「사회주의경제와 균형」,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최진성(1974), “련합기업소의 창설은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획기적조치,” 「근로자」, 1974년 12월호.
- 통일원(1996), 「북한 경제통계집」.
- 한국산업은행(1994), 「남북한산업의 구조 비교 : 북한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중심」.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1995), 「북한의 산업」.
- 한국은행(1994, 1995, 1996, 1997), 「북한 GDP 추정 결과」(각년도).
- 한득보(1992),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2 :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분야들에서 작용하는 경제 법칙과 범주」,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황경덕(1958), 「절약과 저축」, 평양: 국립출판사.
- 황도연(1957), “인민 경제 체 예비의 적발 동원에 관한 경제 통제적 고찰,” 「경제건설」, 1957년 7월호.
- Cartelier, J.(1991), “L'Economie Politique de François Quesnay,” F. Quesnay, Physiocratie, Paris: Flammarion.
- Marx, K.(1977), Contribution à la Critique de l'Economie Politique, Paris: Editions Sociales(trad. par M. Husson & G. Badia).
- Salama, P.(1982), Sur la Valeur : Eléments pour une Critique, Paris: Maspero.
- Schumpeter, J. A.(1954),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London: George Allen & Unwin.
- Sraffa, P.(1960), Production of Commodities by Means of Commodities, Cambridge: C.U.P.
- Sweezy, P. M.(1956),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 Principles of Marxian Political Economy,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